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국회 방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나가고 있다. 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

# ‘국민과 함께 한다더니’... 한 ‘오락가락 행보’에 비난

동훈

윤 “우리 당에 일임” 담화에 급선회  
정치적 이해득실 따라 입장 번복  
김민석 “기껏 원외 당 대표일 뿐”  
홍준표 “국민은 국정 맡긴 일 없어”  
조국 “2차 친위 쿠데타 도모” 비판

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오락가락한 태도로 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의 염원과 대의적 명분을 외면하고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개인적,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

듯 바꾸면서다. 한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아내겠다”고 밝혔으나 다음날인 5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선화했다.

이어 6일에는 예정에 없던 긴급 최고위를 소집한 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탄핵에 찬성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다가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국민의힘)

에 일임한다”고 밝히자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의 조기퇴진은 필요하다”면서도 탄핵 찬성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5시 개회한 국회 본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인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 이태표 방지를 위해 집단퇴장하며 결국 탄핵안을 불성립시켰다.

이러한 한 대표의 행보는 윤 대통령의 사과와 임기 단축을 전제로 야당이 주도하는 탄핵을 저지함과 더불어 야당에 정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밝힌 만큼 자신의 정치적 세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저버린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한 대표는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국민 담화를 열고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해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같은 한 대표의 행보에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는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스스로 한동훈 특검과 당계시판 댓글 사건 등으로 정치적 공지에 몰려 있고, 기껏해야 임기가 정해진 원외 당대표일 뿐”이라며 “어떤 헌법적, 법률적 권한도 없다”고 평가하며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국정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한동훈에게 국정을 맡긴 일이 없다. 당원들이 당무를 맡겼을 뿐”이라며 “당무도 사감으로 운영하다 탄핵 사태까지 왔으면 당 대표도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며 한 대표에 대해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개인 정치에 몰두하며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 대표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오지현 기자

## 광주시의회 “시민들과 함께 尹 끌어내리겠다”

“헌정질서 바로 세워야”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무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을 강하게 규탄했다.

광주시의회는 8일 긴급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다”며 “믿을 수 없는 결과에 분노가 치민다. 시민과 함께 꼭 윤 정권을 끌어내리겠다”고 밝혔다.

의회는 “국민의힘은 역사와 법 앞에 엄정한 심판을 받으라는 시민의 명령을 저

버렸다”며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해 유린하는 등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내란을 일으킨 범죄자를 대통령 자리에 그대로 두란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가의 미래와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을 탄핵해 헌정질서를 조속히 바로 세워야 한다”며 “시의회는 매서운 추위에도 전국 곳곳에 모였던 수십만 시민들이 목이 쉬도록 외쳤던 ‘반란 수괴, 윤석열 탄핵’의 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 국회가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때까지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현 기자

## 日 언론, 尹 탄핵 표결 불성립 대서특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성립 폐기와 관련해 일본 언론은 8일 일제히 1면 주요 기사를 이를 보도했다.

마이니치·아사히·요미우리·산케이·니혼게이지(닛케이)·도쿄신문은 일제히 이날 오전 1면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기사를 실었다.

마이니치신문은 “원래 지난 3일 밤의 계엄령은 헌법 제77조가 정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군부대를 국회나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는 것이 한국 헌법학자의 통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 차

원에서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또 당초 지난 4일 새벽 계엄령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에도 국회 부근에 더 많은 의원이 있었는데도 18명만 참여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계엄령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실을 내어 “윤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직에 머물게 됐다. 하지만 여론 조사에서는 국민의 7할이 탄핵소추에 찬성했다”면서 “구심력 회복이 불투명한 윤 대통령은 언제까지 대통령 자리에 머물 것인가. 한국 정치의 혼란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혹평했다.

뉴스

## 박찬대, 국힘 의원 108명 호명 “돌아오라” 호소

‘표결 무산’ 국회 본회의장서

지난 7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소란도 발생했다.

국회 본회의가 개회되기 전부터 회의장 앞 로텐더 홀과 본회의장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돌았다. 국민의힘이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 건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당론을 정하면서 야당 의원들은 격앙된 모습으로 국회 로텐더홀에 모습을 드러냈다. 민주당 보좌진들은 회의장에 들어가는 여당 의원들에게 ‘탄핵, 탄핵’을 외치며 소란이 이어졌다.

본회의장 안에서는 ‘탄핵 부결은 내란 공범’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야당 의원과

‘방호권을 발동해달라’며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충돌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얕아’ ‘비겁한 사람들’이라고 소리 지르는 등 고성도 오갔다.

회의장이 소란스러워지면서 상대방을 향한 거친 언사가 오간 것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의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면서부터였다.

박 장관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적 요소를 설명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물러가라”, “어디서 장관 코스프레를 하고 있나”, “내란공범 체포하라”라며 항의했다. 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발언대를 돌아 나오는 박 장관을 향해 샷대질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당직자와 보좌진 등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라”, “부역자”라며 막아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져나간 본회의장에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만 남았다.

대통령 탄핵안은 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8표 이상의 이태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탄핵안 투표 불참으로 이태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될 위기에 처하자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 대통령실, 윤 대국민담화 이후 침묵 일관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사과 이후 어떤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 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에 대해 일침 언급하지 않은데 이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동 대국민담화와 관련해서도 침묵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대국민담화에서 “제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한 만큼 계엄 사태와 탄핵안 부결 후 국회 상황과 당-내각 간 논의를 우선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9일로 예정돼 있던 대통령-총리 주례회동을 취소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총리와 한 대표가 이날 공동 담화에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여당-총리 공동 국정 운영’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통령이 임기와 정국 안정 방안을 일임했다고 해서 곧바로 퇴진과 직무 배제를 언급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고 한다.

헌법이 정한 직무 정지나 파면이 아니라면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들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목소리에 대해 “여러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떤 입장도 내기 어렵다. 당이 논의하고 있으니 당분간은 특별한 입장 표명이나 메시지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김선욱 기자